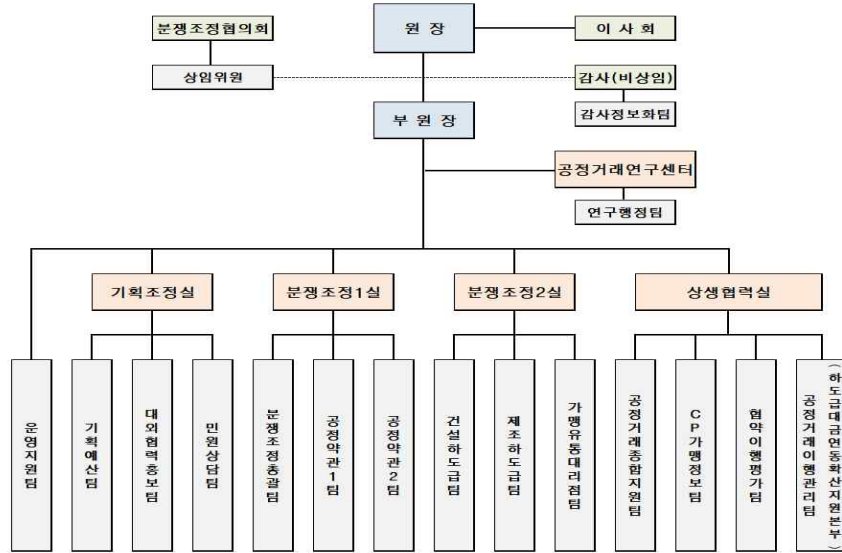

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

2026. 1. 12.

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(요약)

1. 기관 현황

① 기구 및 조직 현황: 4실 1센터 16팀



② 인원 현황

구분	합계	임원	일반직	연구직	별정직	무기직
정원	125	2	100	9	2	12
현원	122	2	95	9	1	15

③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5 예산(A)	2026년 예산(안)(B)	증감	(B-A)/A
				(B-A)/A
계	14,662	16,583	1,921	13.1

④ 기관 주요 임무

- (분쟁조정을 통한 중소기업자 피해구제) 불공정·가맹·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간 분쟁을 무료로 조정
- (갑을분야 맞춤형 공정거래 지원) 갑을분야 사업자 대상 애로·고충 상담, 소송지원, 피해예방 교육 등 수행
- (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)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등급평가, 협약이행평가,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, 공정위 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관리 등
- (공정거래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) 주요 산업별 경쟁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, 경쟁영향평가 등

2. 중점 추진과제

1 분쟁조정 효율화를 통한 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 국정과제 65

- (고객 중심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)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(200회 이상), 조정성립사건 이행점검 강화(분기별), 온라인 협의회 개최(5회)
- (분쟁조정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) 조정위원 절차 참여 확대(20회), 조정 전담인력 직무교육 확대(4회), 조정 적극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발굴
- (분쟁조정제도 인지도 제고) 분쟁사례 중심 보도자료 배포(4회), 조정사례 누리집 게재(6회), 분야별 불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배포 확대

2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국정과제 65

- (법률지원 서비스) 영세사업자·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·법률문서 작성 지원(150회 이상), 전문법률상담 실시(2,500회)
- (교육·컨설팅·상생협력 촉진사업 추진) 중소기업자·소상공인을 위한 불공정 거래 피해예방 교육(60회), 영세사업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(15회) 제공 등
- (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이용 활성화) 센터 개소식 시기 집중 홍보, 유관기관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배포(상반기)
- (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기반 강화) 공정거래종합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제·개정 지원

3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촉진

- (CP 문화 확산 및 등급평가 개선)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및 현장 설명회 개최(18회), 공기업·공공기관 대상 CP 설명회 개최(2회), CP 규정 및 평가지침 개정(상반기)
- (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활성화) 신규 참여 유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(30회), 분야별 평가 기준 설명회 개최(4회) 및 설명자료집 배포, 실무자 간담회(4분기)
- (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) 업종·지역 특성 반영한 설명회 개최(28회), 연동계약 체결 지원 맞춤형 컨설팅 제공(24회),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 국정과제 67
- (동의를결·시정조치 이행관리 내실화) 공정위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분야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 추진

4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

- (정책 적합성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) 경쟁당국 법 집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, 체계적 성과 관리 위한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고도화
- (경쟁영향평가 역량 제고)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(12회)를 통한 평가 품질 향상
- (공정거래 학술 생태계 확장) 유관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(5회) 등 네트워크 강화, 연구업무협의회 활성화(12회), 학술연구 지원사업 활성화 등

3. 경영관리실적 및 외부지적 개선

1 경영관리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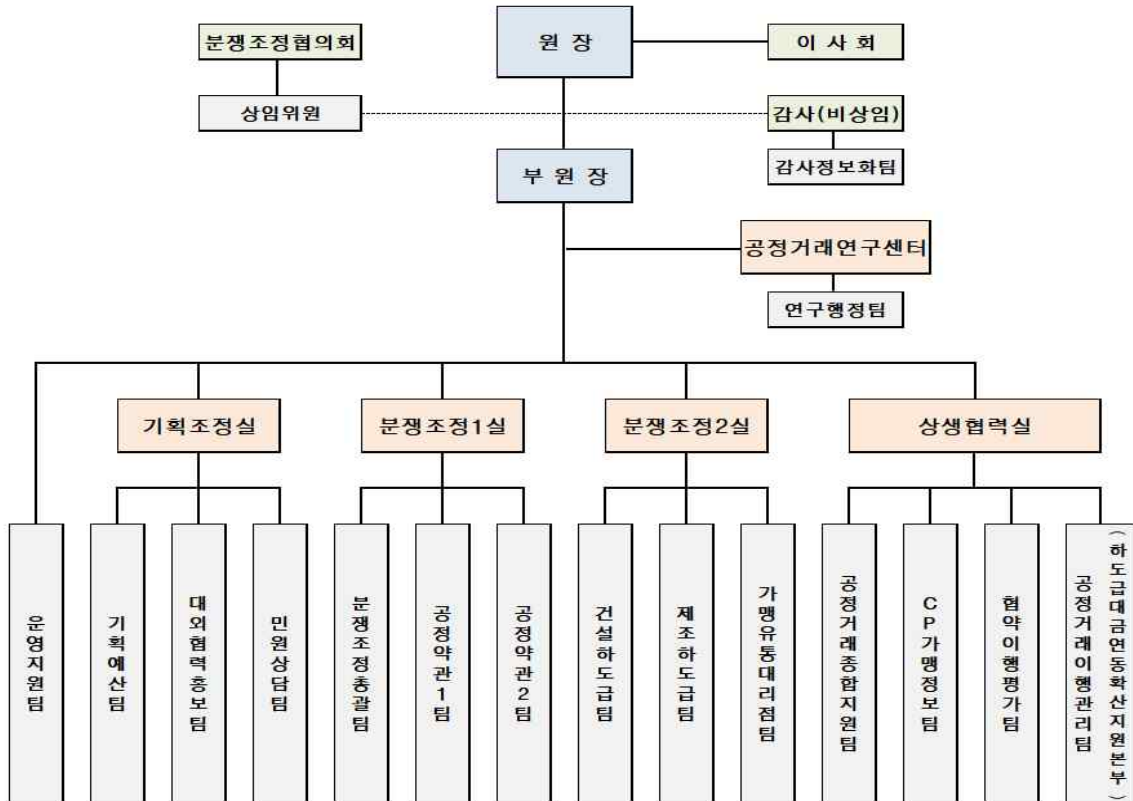
- 안전 및 재난관리
 - (정보보안) 보안 솔루션 운영, 정보유출 방지 위한 접근권한 점검 등
 - (개인정보보호) 개인정보 접속기록 로그기록 점검,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등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
 - (찾아가는 서비스) 지방 순회 상생협력 설명회 개최 및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등
 - (상생노력) 협약이행평가,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통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 기여
- 대국민 소통 노력
 - (경영정보공시) 공시 정확성·적시성 관리, 공시 입력 오류 관리 체계 강화
 - (고객 중심 서비스) 사건처리 절차 안내 강화 및 모바일 기반 민원 처리 가능 확대 등

2 외부지적사항 개선 노력

- 해당사항 없음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

2 인원 현황

(단위: 명, 기준: '26. 1. 1.)

구분	합계	임원	일반직	연구직	별정직	무기직
정원	125	2	100	9	2	12
현원	122	2	95	9	1	15

3 예산 현황

□ '26년 총 예산: 16,583백만 원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5 예산(A)	2026년 예산(안)(B)	증감	(B-A)/A
계	14,662	16,583	1,921	13.1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가. 중소기업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분쟁조정 내실화

- 분쟁조정 사건 4,726건 접수(전년대비 17%↑) 및 4,407건 처리(전년대비 15%↑)
 - 평균 처리기간 57일 이내 사건 처리, 조정 성립률 76%*
 - * 신청취하, 당사자 폐업, 연락두절 등으로 종결되는 건을 제외하고 산정
 - 조정 성립을 통해 약 1,221억 원*의 피해구제 효과 달성
 - * 조정금액 1,145억 원 + 절약된 소송비용(인지대, 송달료) 76억 원
- 적극적인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
 - (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) 생업 종사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분쟁조정서비스 217건 시행('25.11.)
 - ※ (1월~5월) 총 70건(월평균 14건) → (6월~12월) 총 147건(월평균 21건)으로 운영 확대
 - (대면조정 활성화) 분쟁당사자 대면조정 의무화 권고 및 촉진계획 마련(8월), 조사관별 실적 관리 정례화(월별)
 - (성립사건 이행현황 점검) 조정 성립 사건 합의사항 이행 여부 점검(분기별) 및 불이행시 사후조치 안내를 통한 서비스의 완결성 확보
-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체계 정비
 - 분쟁조정 절차 개선 및 제도 정비*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 - * 분쟁조정사건처리시스템 기능 개선, 조정절차 종결 사유 정비 등
- 분쟁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국민 정보 제공 강화
 - '24년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정보를 분석·정리한 보도자료 발표
 - 분쟁조정 사건의 다양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비교·분석한 현황 책자 발간

☞ (분쟁조정의 실질적 성과 향상) 분쟁조정 접수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으나, 평균처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업무체계 정비와 역량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의 질적 개선 및 인지도 제고 등 필요

나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서비스 혁신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

□ 가맹·대리점 분야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

- 전문상담 1,617건 제공, 가맹희망자 대상 창업피해 예방상담 166건 실시
- 영세 사업자 대상 법률문서 작성 지원 81건, 소송대리 지원 7건 수행
-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(53회), 영세 가맹본부 대상 맞춤형 컨설팅(12회) 실시

□ 공정거래 및 자율준수 관련 평가 업무 안정적 수행

- (CP*등급평가) 78개사(전년 대비 20개사↑) 대상 CP 운용현황 등 평가 수행
*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이하 'CP')
- (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) 259개사*(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등 전년 대비 7개사↑) 대상 평가
* 하도급(209개사), 대규모유통업(25개사), 가맹사업(12개사), 대리점(13개사)

□ CP제도·공정거래협약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

- (CP제도) 등급평가 설명회(2월), CP 심포지엄(7월) 및 포럼(12월), 찾아가는 설명회(16회)
- (공정거래협약) 평가기준 설명회(1·2월), 맞춤형 컨설팅(38개사), 모범사례 발표회(12월)
- (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) 연동제 설명회(28회) 및 간담회(2회) 개최, 연동계약 체결 지원 컨설팅(24개사), 맞춤형 상담(999건)을 통한 이해도 제고

□ 공정위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체계적 수행

- 동의의결 이행관리 14건*, 시정조치 이행관리 3건** 수행 중
* (㈜유진종합건설, ㈜한솔, ㈜지에스리테일 등 4개사, ㈜하이브 등 5개사, ㈜카카오, 브로드컴, 구글)
** (㈜경보제약, ㈜대한항공 등 5개사(이행감독위원회 사무국), ㈜아이센스)

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정거래 전문교육 확대

- 중소기업, 공공기관, 법위반 사업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제공(23회)
- 온라인 교육플랫폼(공정거래교육센터)의 안정적 운영
※ 공정거래교육센터 누적 가입자수 49,287명, 수료자수 71,248명

☞ (소송대리 지원서비스 확대) 전문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지원 실적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소송대리 지원은 감소 추세('23년 22건→'24년 15건→'25년 7건)
• 소송지원제도 이용률 증대를 위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

☞ (상생협력사업 참여 저변 확대) 평가 참여기업은 확대되었으나 공공기관 CP등급평가('23년 없음→'24년 2개사→'25년 4개사), 비지수기업 협약이행평가('23년 18개사→'24년 20개사→'25년 17개사)의 참여 비중이 낮고, 연동제 기준지표 선정 관련 기업들의 고충도 지속되고 있어 제도 접근성 개선 필요

다 공정거래 제도 발전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

□ 경쟁당국 법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실적 확대

- 정책 연구 4건, 이슈 검토 17건 등 총 21건의 연구 수행(전년 대비 40%↑)
※ ESG와 반독점 규제, AI 분야 경쟁 제한 조항, 데이터 시장의 공정거래법 적용, 플랫폼 반독점 사례 연구 등 최신 경쟁정책 이슈 반영 ([붙임 4] 참고)
- 국가승인통계 「한국기업의 사업 다각화 지수」 작성 및 보급*
* 통계청 국가통계포털(www.kosis.kr) 및 조정원 누리집을 통해 공시
- AI, 플랫폼 등 신산업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당국의 정책 수립 지원

□ 경쟁제한 요소 차단 및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

- 공정위로부터 의뢰받은 중요규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경쟁제한성 제거 및 완화를 위한 대안 제시(13건)
- 의원입법안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 및 의견 제시(633건)

□ 연구 주제 선정 및 성과 관리 체계 강화

- 공정위와의 연구업무협의회 운영(11회)을 통한 연구 연계 체계 강화 및 정책 수요 기반의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수행 체계 마련
- 연구과제 선정-수행-결과물 도출에 이르는 단계별 성과 관리를 위한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신설(25.7.) 및 운영

□ 유관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성과 확산

- 학계·정책기관과의 공동학술대회(5회) 개최, 공개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통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
- 경쟁정책 수립 및 법집행 활용을 위한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과제(4건)에 대한 최종 발표회 개최

☞ **(정책연구 활성화)**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응한 전략적인 주제 선정 및 연구 수행 필요

☞ **(연구성과 활용 강화)** 경쟁당국의 정책방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연구성과 활용 강화

2 향후 업무추진방향

미션

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.

비전

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전문기관



핵심과제

실천과제

분쟁조정 효율화를 통한
중소사업자
피해구제 강화

- ▶ 고객 중심의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
- ▶ 분쟁조정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
- ▶ 피해구제 저변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제고

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
통한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

- ▶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
- ▶ 체계적인 교육·컨설팅·상생협력 촉진사업 추진
- ▶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
- ▶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한 관련 법 제·개정 지원

공정거래 자율준수 및
상생협력 문화 확산 촉진

- ▶ CP등급평가 업무 개선 및 CP문화 확산 기반 마련
- ▶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활성화
- ▶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확산 체계 구축
- ▶ 공정위 동의의결·시정조치 이행관리 내실화

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
법 집행 지원을 위한
연구 기능 강화

- ▶ 경쟁정책 연구 체계 강화와 정책 적합성 제고
- ▶ 경쟁영향평가 업무 기반 강화 및 평가역량 제고
- ▶ 연구 관련 대외 협력 활성화 및 학술 생태계 확장

Ⅲ. 중점 추진과제

① 분쟁조정 효율화를 통한 중소기업자 피해구제 강화 국정과제 65

가. 고객 중심의 맞춤형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

- (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) 방문 조정을 원하는 영세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, 조정 등을 실시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 확대 추진(수시)
- (합의사항 이행 점검) 조정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성립사건 합의 사항 이행 여부 점검 지속 추진(분기별)
- (온라인 협의회) 서면회의의 단점*을 보완하고 분쟁당사자의 적극적인 조정 절차 참여를 위하여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협의회 개최(5회)
* 서면회의 진행 시 협의회 위원 간 토론이 생략되어 복잡·다양한 사건 처리 곤란

나. 분쟁조정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

- (조정위원 참여 확대) 분쟁당사자의 출석조사 단계에서부터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의 사건 처리 절차 참여를 확대하여 조정성립률 제고 노력(20회)
- (직무교육 확대) 분쟁조정 전담인력의 조정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교육, 국내외 ADR* 전문기관의 교육 연수 등 직무교육 확대(4회)
* 대한상사중재원, 싱가포르 조정센터(SMC) 등
- (분쟁조정 참여 유인 강화) 분쟁조정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추진을 검토하여 사업자들의 조정 절차 참여 적극 유도

다. 피해구제 저변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인지도 제고

- (분쟁조정 사례 홍보)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쟁 사례 등을 다룬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역할 및 중요성 환기(4회)
- (피해예방 정보 제공)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해 분쟁 조정사례 누리집 게재(6회), 분야별 불공정거래 체크리스트 배포 확대

가.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

- (소송지원) 분쟁조정 등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영세사업자*를 대상으로 외부 법률 대리인을 연계한 소송지원 서비스 제공
 - * 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기준 일정 금액 이하 영세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
 - ※ 티메프 사태 등 대규모 피해 발생시 피해사업자 대상 즉각적인 법률 조력 가능
- (법률문서 작성 지원) 법률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문서 작성 지원서비스* 실시
 - * 공정위 신고서, 분쟁조정 신청서,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등
- (전문 법률상담)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영세사업자 대상 상시 출장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에 기여(2,500회)
 - * 가맹점주·수급사업자·대리점주 대상 방문 상담,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부스 운영 등

나. 체계적인 교육·컨설팅·상생협력 촉진사업 추진

- (피해예방교육) 가맹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, 대리점 등 대상 최신 법 개정 동향, 반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분쟁조정 사례를 연계한 피해 예방 교육 실시(60회)
- (영세사업자 컨설팅) 영세 가맹본부 및 원사업자 등 대상 범위반 리스크 진단, 선제적 개선방안 제시 등 내실화된 컨설팅 제공(15회)
- (상생협력 촉진사업)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확산, 업종별 간담회 활성화 등

다.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

- (개소식) 센터 정식 개소(4월)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 실시
- (업무설명회) 중견기업연합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회원사 대상 업무 설명회 개최를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서비스 안내, 홍보책자 배포 등

라.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한 관련 법 제·개정 지원

- 공정거래종합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명시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* 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**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
 - * 「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분쟁조정법) 제정안」(의안번호 2203028, 정부안)
 - *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법) 개정안」(의안번호 2204585,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)

3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촉진

가. CP등급평가 업무 개선 및 CP문화 확산 기반 마련

- CP등급평가 신청 활성화 추진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
 - (확산 활동 강화)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, 희망 기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(18회)
 - (공공 분야 CP활성화) 공기업공공기관 현장 설명회 개최 통한 CP도입 유도(2회)
- CP등급평가 체계 개선 및 전문성 강화
 - (규정 개정 지원) 평가위원 의견수렴을 통한 CP 규정·평가지침 개정
 - (평가 역량 강화) 분야별 전문가 위촉 등 평가위원 풀(Pool) 확충 및 전문성 제고

나.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참여 활성화

- 공정거래협약 제도 확산 노력을 통한 신규 참여기업 확대
 - (협약컨설팅 활성화) 협약 미도입 기업 대상 협약제도 1:1 맞춤형 컨설팅 실시(30회)
 - (정책안내서) 최신 ESG경영 강화, 상생협력 문화 확산 사례 등 추가한 안내서 배포
 - (평가기준 설명회) 분야별 하도급유통기맹대리점 설명회 개최(4회), 설명자료집 배포(1분기)
 - (실무자 간담회) 참여기업 개선의견 청취 및 피드백 반영 정례화(4분기)

다.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한 확산 체계 구축 국정과제 67

- 연동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
 - (현장 밀착형 설명회) 업종·지역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설명회 운영(28회)
 - (연동제 역량강화) 연동 대상 확대(에너지 비용 등) 대비 교육자료 개정 및 지역별 사업자 교육 실시
-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강화
 - (간담회 정례화) 연동약정 체결과 연동제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
 - (우수사례 발굴) 연동제 운영 모범 기업 발굴, 발표회를 통한 우수사례 전파

라.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공정위 동의의결·시정조치 이행관리 내실화

- 공정위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분야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을 시행하여 이행관리 업무의 실효성 제고

4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법 집행 지원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

가. 경쟁정책 연구 체계 강화와 정책 적합성 제고

- (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)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당국의 정책 방향과 법 집행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주제 선정*
 - * 조정원 내부제안, 공정위·외부전문가 제안 과제 등을 취합(25.12.)→후보과제 리스트 작성→'26년 정책연구 후보과제 도출(과제발굴회의)→정책연구과제 확정(정책연구 선정위원회(26.1월 中))
- 공정위 정책 수요 기반으로 연구 주제 체계화, 공정위 연구자문회의·실무회의 연계로 정책 적합성 강화
-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 이슈를 사전 예측하고 정책 대응 전략 마련에 필요한 연구 수행
- (연구 성과관리 강화)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운영체계 고도화, 성과평가 기준 지속 정비를 통한 평가 체계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

나. 경쟁영향평가 업무 기반 강화 및 평가역량 제고

- (출연사업 전환 추진) 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,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사업 전환 추진
- (평가 품질 제고) 외부 전문가(경제학·법학·규제 분야) 자문 적극 실시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로 전문성·신뢰성 확보(12회)

다. 연구 관련 대외 협력 활성화 및 학술 생태계 확장

- (유관기관 학술 네트워크 강화) 한국산업조직학회, 한국경쟁법학회, 한국 하도급법학회, 한국규제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 학술대회 정기 개최(5회)
- (유기적 정책연계 강화) 경쟁정책과 연계된 연구 수행을 위한 공정위-조정원 간 연구업무협의회 운영(12회)
- (학술연구 지원사업 활성화) 다양한 관점에서 학술연구 지원을 활성화*하여 공정거래 분야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, 학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
 - * 학술연구 지원사업 주제 발굴 시 자유주제 선정 범위 확대

IV. 경영관리실적

① 안전 및 재난관리

-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·운영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역량 강화
 - 연간 정보보안 추진계획 수립·시행, 웹방화벽 등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·운영
 - 업무상 기밀정보·중요정보 접근 통제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권한 점검
-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보안사고 상시 예방 활동
 -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·로그 점검을 통한 보안사고 발생 징후 점검(월1회 이상)
 - 「사이버보안진단의 날」(월1회 조치율 100%),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(이수율 74%)

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노력

- (지역경제 활성화) 지방 순회 상생협력 사업 설명회* 및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와 분쟁 예방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
 - '25년 영남지역 중소·중견기업 등 57개사 대상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 포럼 개최
- (상생협력)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거래환경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형성 지원
 - 협약이행평가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통한 중소기업 거래환경 개선 유도
 - CP 확산 및 등급평가 참여 확대 통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

③ 대국민 소통 노력

- 경영정보공시 관리 및 공시 품질 제고 노력
 - 공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확보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
 - 공시 변경 및 벌점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공시 입력 오류 예방 관리체계 강화
- 고객만족도 향상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('24년 고객만족도 79.3점(전년 대비 1.7점↑))
 - 사건처리 절차별 통지(SMS·카카오톡 등) 강화 및 사업별 정보 제공 채널 확대 운영
 - 성립사건 이행점검, 사업별 수요자 의견 수렴 정례화 및 피드백 반응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, 해피콜 서비스 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